

국가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방향 (The Direction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이 필 중*

Abstract

Defense minister of the ROK, Kim Dong-sin suggested that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will change from "scenario-based" to "capability-based". Entering the 1990s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met difficulties to accomplish its goal, modernizing and strengthening of its force structure and weapon systems because of limited budget.

The concep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could commit a fault in estimating total amount of defense resources required for force planing. This is because that the total amount of defense resources related to force plan for the 15 years is fixed to embody military strategy. The concep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plays a role as a constraint in choosing a military strategy. This has no connection with military build-up. Therefore the resources of mid-term military build-up program and scale of annual defense budget could be affected by the situations of its national economy.

In this respect, the scale of annual defense budget and resources c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economic condition, however, the total amount of resources required to build-up military force for 15 years, namely resources of military force planing requirement for 15 years, is given already for the accomplishment of military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of the ROK's military build-up policy in a viewpoint of capability-based military build-up.

* 국방대학교 군사정책학과

I. 序 論

韓國의 軍事力建設은 1965년 韓國軍의 월남과병에 따른 1966년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태동되었다. 이어서 1971년 3월 미7사단의 철수 등, 미국의 對韓半島의 安保公約의 不安定性에 對備하기 위해 마련된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시절 第1次 韓國軍現代化 5箇年 計劃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명실상부한 軍事力建設은 財源調達을 위해 目的稅인 防衛稅制가 확립된 1975년 第2次 韓國軍現代化 5箇年 計劃(올곡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이다.

이러한 計劃의 持續的인 推進結果 30여년 동안 韓國은 個人火器에서부터 장갑차, 전투기, 구축함 및 잠수함 및 미사일, 레이다 등 각종 尖端電子裝備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게 되었다. 이러한 能力을 保有하기 위해서 投入된 國防財源도 총62조2097억원으로 이는 전체 國防費의 약32.3%에 해당된다.¹⁾ 이 기간동안 韓國의 軍事力建設 政策目標은 크게 두 가지로 區分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初期期 20여년 동안의 目標은 優先的으로 現存하고 있는 北韓의 軍事威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北韓 軍事力과의 隔差를 줄이는데 있었으며, 두 번째로 1990년대에 들어서 부터는 自主國防能力을 갖추는데 目標을 두고, 北韓의 威脅과 동시에 統·後未來의 潛在的 威脅에 對備하는데 目標을 두고 軍事力建設을 推進하여왔다.²⁾

軍事力建設은 現存 및 未來의 豫想되는 潛在的 威脅과 未來戰場環境의 變化에 對備한 軍事戰略, 그리고 國家經濟能力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특히 1990년 中盤以後에 들어서 부터는 國防部에서 企劃하고있는 軍事力建設政策이 國防豫算確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遲延되거나 그 規模가 縮小되는 現象

이 招來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現實이다. 이는 軍事部門에 있어서 특히 向後 軍事戰略의 具顯에 있어서 隘路點으로 作用하게 될 것은 명확한 事實이다.

따라서 國防部에서는 今年에 들어와서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이라는 새로운 概念의 軍事力建設政策을 提示하고 있다. 이는 國家의 經濟能力이 軍事力建設政策에 가장 重要한 要素로 作用하는 바이를 現實的인 條件으로 받아들여서 實質的인 軍事力建設政策을 推進하겠다는 意志인 것 같다.³⁾

그러나 이러한 意志는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概念의 認識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制約을 받을 수 있다. 즉 軍事戰略을 具顯하기 위한 軍事力所要는 國防企劃體系上: 向後 15년에 걸쳐서 반드시 確保되어야 할 戰力水準이다. 따라서 目標所要和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것은 國家經濟能力이고 이를 確保하기 위한 중·단기의 軍事投資財源은 해당기간동안의 國家經濟狀況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概念 하에서만 目標所要가 達成되지 중·단기간의 財源所要가 國家經濟能力에 의해서 決定된다면 해당 기간 내에 결코 達成될 수 없다. 즉 經濟能力과 經濟狀況이라는 두 概念을 明確하게 認識해야 軍事力建設 目標가 達成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本 研究은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의 概念을 正確하게 認識함으로써 軍事力建設政策의 目標가 達成될 수 있다는 事實과 韓國의 軍事力建設政策에 대한 分析과 향후 軍事力建設方向을 제시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本 論文은 위에서 언급된 軍事力建設에 관련된 要素들(威脅, 軍事戰略, 國家經濟능력)의 變化에 부응할 수 있는 軍事力建設의 方向에 대하여 論議해보기로 하겠다.

II. 國家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의 概念

韓國의 경우 未來 戰場環境 및 軍事威脅에 대비한 軍事力 建設과 이미 建設된 軍事力の 運營을 위한 國防財源의 所要對比 配分趨勢는 1980년대 後半 이후 점차 減少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後半 이후에는 그 減少程度가 擴大되어오고 있다. 특히 2천년대에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의 對北 햇볕정책으로 국민들의 北韓에 대한 軍事的 威脅認識이 점차 緩和되어 오다가 지난해 6·15선언 以後에는 南·北韓사이에는 國防長官級會談 및 경의선 연결을 위한 軍事實務者級會談이 몇 차례 있었을 뿐 實質的이고 具體的인 軍事的 緊張을 緩和시킬 合意事項 및 措置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 국민들에게는 北韓의 對南 軍事威脅이 사라지고 平和共存의 時代에 접어들 듯한 幻想의 錯覺에 빠져있는 듯한 認識을 가지고있는 것 같다.⁴⁾

이러한 認識 때문에 韓國의 軍事力建設에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로는 未來戰場環境에 附合되는 戰力構造로의 改善作業에 대한 隘路이며, 두 번째로는 이미 建設된 軍事力の 運營上 隘路이다. 이러한 隘路事項들은 源泉의으로 適正水準의 國防豫算確保의 어려움에서 出發되고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어려운 狀況下에서 國防部에서 새로이 提示하고있는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의 概念을 잘못 認識하는 경우 韓國의 中·長期 軍事力建設을 더욱 惡化시킬 수 있는 질곡에 빠뜨릴 憂慮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正確한 認識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軍事力建設關聯 政策擔當者들 및 국민들은 南·北韓이 平和共存 期에 들어서면 당연히 國防財源의 規模가 줄어들 것이라고 認識하고있는 개

事實이다. 또한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의 軍事力建設을 위한 國防豫算의 增加는 平和共存을 깨뜨리는 意志이기 때문에 韓國의 軍事力建設을 저지시킬 수 있는 빌미를 提供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立場에서는 未來의 不特定威脅 및 戰場環境에 對備하기 위해서는 戰力構造의 現代화가 必須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의 正確한 概念을 認識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1.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의 概念

最近 2천 년대에 들어서서 國防部에서는 시나리오에 基礎한 軍事力建設概念을 탈피해서 國家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을 政策의 基本概念으로 하고 있다.⁵⁾ 그러나 軍事力建設에 있어서 두 概念이 完全히 排他的이며 獨立的인 概念이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다. 즉 두 概念을 서로 補完的으로 並行하여 軍事力 建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概念에 대한 具體的인 定義가 없기 때문에 解析에 混線이 우려되며, 특히 中·長期 軍事力建設을 위한 國防財源의 確保 및 매년 國防豫算의 確保에도 支장을 줄 可能性이 있어 이에 대한 正確한 概念定義가 必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선 國防財源의 所要는 企劃과 計劃所要로 區分되어질 수 있겠다. 또한 計劃所要는 매년 國防豫算의 規模決定에도 直接的으로 關係가 있다. 이러한 國防財源의 所要는 결국 國家經濟의 支援能力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는 企劃, 計劃과 豫算規模決定에 따라서 概念이 相異하다는 事實이다.

國家經濟能力과 軍事力建設과의 關係는 國防企劃管理體系上: 軍事戰略의 選擇 時 國家經濟能力이 制限要素(constraint)로서의 役割에서 起因된다고 볼 수 있다. 즉 軍事戰略의 目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軍事力이라는 手段이 必須的인데 이러한 軍事力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經濟能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提示되고있는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이란 軍事戰略의 選擇課程에서 하나의 基準要素로서 作用하는 것이지 이미 選擇된 軍事戰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中·長期 軍事力의 建設에 必要的한 國防財源의 所要가 國家經濟能力에 制約을 받을 수 는 없다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 國防企劃體系上: 企劃段階에서의 對象期間이 15년이기 때문에 이기간 동안의 目標 軍事力所要가 中·長期 合稱 軍事戰略 目標 企劃書(JSOP)에 수록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軍事力을 建設하기 위해서 所要되는 財源은 向後 15년 동안의 國防財源所要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에 必要的한 適定水準의 國防財源規模는 一定한 것이며, 이는 變化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이를 國家經濟能力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방국의 安保支援이나 다른 軍事戰略을 選擇할 수밖에 없게된다. 韓國의 경우에는 과거 1960,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支援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韓國의 經濟能力이 확장됨으로서 1980, '90년대 및 최근에 들어와서는 韓國 스스로 軍事力을 建設하고 있는 것이다.⁶⁾

또한 國防企劃管理體系上: 中期計劃은 企劃段階에서 提示된 向後15년 동안의 目標 軍事力의 所要와 이에 따른 國防財源所要를 向後 5년 동안의 國家經濟狀況을 고려하여 財源所要의 規模를 決定하게 된다. 즉 向後 15년 동안의 國家經濟能力을 고려해볼

때 經濟狀況이 호전될 기간동안에는 5개년 단위로 해서 軍事力建設을 많이 하고 經濟狀況이 어려울 때는 적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년도 豫算規模도 이러한 概念에 의해서 1년 후의 經濟與件에 따라서 國防豫算의 規模가 決定되게 된다. 따라서 15년 동안의 國家經濟能力에 따른 目標軍事力의 建設을 위한 總體的 國防財源의 所要는 規模가 變化되지 않고 단지 中·短期的 國家經濟狀況에 따라서 國防財源의 規模가 決定된다는 것이다. 結局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이란 中期 및 단 년도의 國防財源을 의미하지 않고 企劃段階에서의 目標軍事力建設을 위한 財源所要를 의미한다. 만약 中期 및 매년 國防財源의 規模가 國家經濟能力에 基礎해서 規模가 決定된다면 一定時點의 目標 軍事力의 確保는 거의 不可能해진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2. 韓國의 中·長期 軍事力建設을 위한 財源所要 規模

本 章에서는 위에서 論議된 內容 중에서 韓國의 軍事力建設을 위해 必要的한 未來 不特定 威脅 및 戰場環境에 附合할 수 있는 軍事力 建設을 위한 財源所要 規模를 언급하고자 한다. 現在 및 未來의 韓國 國防費의 適正水準에 관한 研究는 '90年代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研究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 첫째는 國防費 規模의 決定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要素들을 設定하여 韓國과 他 國家들과의 이러한 要素들의 상대적 比較分析을 통하여 軍事力 및 兵力의 水準과 이에 따른 國防費의 水準을 提示하는 “相對的 比較分析 技法”에 의한 研究와⁷⁾ 둘째로는 未來環境을 豫測하여 國防政策 및 軍事對備 態勢에 대한 政策的 代案 導出과 이에 따른 軍事的 所要를 豫測하여 이러한 所要와

國家經濟의 支援能力을 감안한 適正水準의 國防費를 산출하는 研究들로 區分된다.⁸⁾

이러한 研究들의 大部分은 現實의인 狀況에 主안점을 두어 北韓의 威脅을 고려한 狀態에서 國防費의 適正規模를 GNP대비 적게는 2.6%에서 크게는 4.0% 水準에서 論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水準을 주장하는 學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軍 相關 연구기관 또는 학교기관에 勤務하는 學者들이 提示하고 있는 國防費의 적정 水準은 GNP의 3.5 - 4.0%이고 以外에 民間 大學校 및 연구기관에 所屬된 學者들은 GNP의 2.0 - 3.5% 선을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들은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다. 따라서 政策을 擔當하고 있는 國防部내의 關聯部署에서는 이들이 提示하고 있는 事項에 대해서 關心을 기울여서 政策立案시 參考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主張들의 數值上의 差異點은 주로 軍 關聯 學者들의 主張은 軍事的인 所要에, 그 外的 民間 部門에 從事하는 研究者들의 主張은 國家의 經濟 支援能力 分野에 重點을 두어서 國防費의 적정水準에 關聯한 函數를 導出した 結果인 것 같다. 이러한 研究들 중에서 가장 重要한 變數로 作用했던 北韓의 軍事的 威脅이 소멸되고 난 이후 統 一韓國의 國防費의 적정 水準에 關하여 提示하고 있는 最近의 연구로는 조동호 博士의 統 一 費用에 關聯한 연구이다. 조박사는 “統 一の 經濟的 費用과 使益”의 論文에서 韓半島 分단 費用을 南北韓이 軍事的으로 代치하고 있어 이러한 代치가 없을 境遇 實質적으로 統 一韓國이 保有하여야 할 兵力의 規模와 전력을 建設하고 유지하는데 所要되는 實質의 國防費 以外的 剩餘兵力 및 軍事力에 대한 생산부문과 財源면에서의 機會費用으로 算定하여, 統 一 후의 적정 兵力規模와 國防費의

적정水準을 計算하고 있다.⁹⁾ 이 研究는 논란의 餘地가 많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統 一 후 兵力과 國防費의 水準을 導出하려는 하나의 努力으로서 연구의 價値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國防財源의 所要規模를 論議하기에 앞서 基本的으로 國防費의 適正水準에 대한 均衡的인 認識이 이루어져야 한다. 適正 國防費는 國防分野에서 提起하는 所要와 國家經濟 運營面에서 國家財政의 供給能力의 制限性 때문에 一般的으로 所要와 供給의 政策的 절충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言及했던 바와 같이 軍事的인 所要산출은 未來에 直面하게 될 威脅水準의 정도에 따라 可變的이며, 또한 두 가지 次元으로 區分되어질 수 있다. 첫째, 絶對的인 所要이다. 이러한 所要는 國家의 物理的인 生存을 保障할 수 있는 一般的으로 相對的인 概念하에 軍事弱小國들의 境遇 防禦적인 最小限의 所要를 말한다. 두 번째는 政治的인 所要로서 대부분 相對的인 군사 강대국으로서 自國의 政治的인 意志를 他國에 强要하기 위해서 必要한 積極的인 絶對要素 이상의 超過 所要를 意味한다. 따라서 한 國家의 軍事準備 態勢가 적의 威脅에 對處할 수 있는 水準에 未達할 때 軍事力 所要에 의해 算出된 國防豫算의 所要는 財政供給能力和 절충되기 이전의 絶對的인 所要로서 國家豫算 配分시 최우선적으로 充足되어야 하는 것이 基本原則이다.

그러나 이러한 所要는 資源의 制約때문에 어떠한 國家의 境遇에도 最惡의 시나리오까지를 假定한 完壁한 軍事的인 準備態勢는 不可能하다. 이에 대한 格차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과의 軍事, 外交的인 同盟이나 其他 다른 經濟的인 手段 등으로 補完되어야 한다. 이러한 軍事同盟 關係는 독립국가로서

의 자존과 國益을 損傷시키지 않는 範圍 내에서 相互協力이 締結되고 運營되는 것이 常例이나 威脅 대비 軍事力의 現격한 劣勢는 一方的으로 우방국가에 依存하는 關係가 持續되어 때로는 主權侵害는 勿論 國家利益의 損失이 不可避할 境遇가 發生할 수도 있다. 따라서 國防費의 支出은 最小限의 自主的 抑制力을 保障받을 수 있는 水準이 充足되어야 하나 이와 동시에 초과적이고 浪費적인 要素들은 모두 除去되어야 한다. 즉 國防費 使用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前提되지 않는 國防所要提起는 無意味한 것이다. 또한 國防能力의 建設은 적어도 15-20년의 先行要求 期間(lead time)이 所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投資되는 國防費는 長期間 安定的으로 確保될 수 있는 制度的裝置가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認識하에서 韓國의 國防財源所要를 展望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統一이라는 重要한 狀況變數를 加算하지 않은 狀態에서 純粹 國防財源所要를 2015년까지 展望하였다. 왜냐하면 現實적으로 北韓의 威脅이 常存하고 있는 한 이를 念頭에 두고 所要를 判斷하는 것이 조금은 超過算定(over estimate)이 되겠으나 앞에서 提示한 軍事力 所要가 統一以後를 對備한 目標所要를 中心으로 算定되었고, 現存의 北韓의 威脅對備에 必要한 軍事力所要는 동시에 統一韓國의 軍事力所要를 充當할 수 있는 무기체계 등이 包含되어 있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所要期間은 2015년까지로 만 限定한 것은 앞에서 이미 提示된 軍事力의 所要가 이 期間 내에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前提와 이 정도 水準의 軍事能力이 갖추어지고 戰力構造의 轉換이 期間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統一後 未來를 對備한 適正 軍事力水準으로 評價된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一

後 韓國의 適正 軍事力水準을 여기에서 提示되고 있는 水準보다는 높았으면 높았지 낮아질 可能性은 稀薄할 것으로 判斷된다. 즉 여기에서 提示되고 있는 軍事力의 水準은 統一韓國의 必要 軍事力의 最低水準이라는 사실이다.

國防部에서 제시하고 있는 國防財源의 所要는 아마도 2006년까지의 國防中期計劃에 입각한 財源所要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國防運營에 있어서 국방중기계획은 國防企劃管理 運營體系상 軍事力建設 및 運營部門에 있어서 각 군으로부터 제기된 사업과,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優先順位는 합참에서 마련된 戰爭企劃, 軍事戰略 및 合同戰場 運營概念에 入格한 統合戰力發揮의 極人化를 위한 次元에서 決定되고, 이러한 事業들의 推進與否는 國防部次元에서 國家의 財政支援 能力 判斷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樹立된다. 따라서 중기계획에서 提示되고 있는 財源의 소요는 군사건설부문에 있어서 韓國의 경우 國家의 安否를 위한 絶對的 所要라고 말할 수 있겠다.¹⁰⁾ 즉 이는 效率적이고 經濟적인 國防運營이 前提된 狀態에서 앞으로 韓國이 갖추어야 할 最小限의 目標 軍事力의 所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財源은 반드시 確保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意味한다.

이러한 概念하에 이미 앞에서 提示한 軍事力建設을 위한 財源所要는 軍事力建設 部門에 약160조 원, 運營維持 部門에 약333조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未來 韓國의 目標 軍事力 建設 및 運用에 총 약493조원의 財源이 所要될 것으로 判斷된다.¹¹⁾ 이러한 結果는 國防部에서 提示하고 있는 재원소요를 根據로 추계하여 換算해 보면 國防費 增加率이 年平均 12.0% 水準으로 유지되는 境遇, 軍事力建設과 運營維持 部門의 比率은 年平均 32.3%, 67.7%가 되

고, 軍事力建設 部門의 년 평균 增加率이 16.3%, 運營維持 部門의 增加率은 년 平均 10.1%가 된다. 이와 같은 國防費의 增加率과 配分比率이 維持되는 境遇 軍事力建設 部門에서는 所要의 약 97% 水準이 充足되고, 運營維持 部門에는 所要의 약 92%가 充足될 것으로 判斷된다.

<표-1> 韓國의 國防財源 所要 判斷 ('02 - 2015)

區分 年度	國 防 費		軍事力建設 (國防費 對比:%)	運營維持 (國防費 對比:%)
	規模 (억원)	增加率 (%)		
'02	248,319	11.5	82,442 (33.2)	165,877 (66.8)
'03	275,616	11.0	92,337 (33.5)	183,279 (66.5)
'04-'10 (平均)	2,282,975	9.8	740,784 (32.4)	1,542,191 (67.6)
'11-'15 (平均)	2,119,485	8.7	685,613 (32.3)	1,433,872 (67.7)
總計 (平均)	4,926,395	10.25	1,601,176 (32.3)	3,325,219 (67.7)

<표-1> 에서 提示된 資源配分の 趨勢가 政府의 財政運營과 國防費의 運營 部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98 - '05 期間의 國防費 關聯 總體的인 數值들, 즉 國防費의 년 平均 增加率은 10.4%, 軍事力建設 比率은 國防費의 32.3%, 運營維持費는 67.7%로 計算된다. 이러한 數值들은 과거의 趨勢와 比較해볼 때(最近 4年間 년 平均 國防費의 增加率 10.6%, 國防費의 配分構造 29.1% / 70.9%(防衛力 改善/運營維持))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즉 이는 韓國의 經濟상황 및 韓半島의 政治, 軍事的 狀況(統 · 후는 北韓의 南韓侵攻 등)이 變化되지 않는 한 <표-

1> 에서 提示되고 있는 國防費의 規模가 確保되면 2015년경이 지나면 韓國의 目標 軍事力은 거의 確保되게 될 것이라는 事實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長期間의 目標은 恒常 變化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境遇 統 · 韓國의 軍事力 目標水準은 좀 더 尙尙조정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豫測된다. 왜냐하면 본 研究에서 提示하고 있는 目標軍事力 水準은 所要戰力의 最低水準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統 · 후 南 · 北韓의 軍事統合 費用을 考慮할 境遇 더욱더 그러하다.

III. 威脅에 대한 戰略

威脅이란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現在の 威脅이 있을 수 있고, 未來의 威脅이 있을 수 있다. 韓國의 경우 現在の 威脅이 너무나 커서 未來의 威脅의 重要性을 때로는 妄覺해 버리는 境遇가 많은 것 같다. 또 하나의 威脅으로서는 統 · 以後 또는 統 · 以前의 威脅으로서 不特定 威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威脅들에 대한 對處는 一次的으로 現存의 威脅에 대한 對處가 確實해야만 未來의 威脅도 準備할 수 있는 生存의 前提條件을 達成하기 때문에 優先적으로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대한 對處를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國家資源의 效率的인 使用과 國防財源의 限界성과 오늘날 科學의 發 빠른 發展速度에 따른 武器體系의 尖端化 등으로 마냥 軍事力의 建設政策이 對 北韓 軍事威脅에 置重할 수는 없다. 즉 軍事力 建設의 lead-time을 考慮할 境遇 韓國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韓國의 境遇 軍事力 建設政策 수립 시에는 이러한 諸般 要素들을 考慮한 가운데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1. 韓國의 軍事戰略

가. 現存威脅에 대한 軍事戰略

未來 韓國의 軍事戰略은 결코 현재의 군사전략과 독립되는 가운데 고려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단지 북한의 위협만을 억제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유지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 군사전략의 논의는 본 저자의 생각으로는 統·以前의 軍事戰略과 統·以後의 軍事戰略으로 區分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未來의 軍事戰略은 軍事力 建設政策의 樹立이란 次元에서 고려될 경우, 이미 앞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軍事力 建設의 戰力化 先行要求 期間인 15-20년의 長期間을 考慮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점을 考慮하여 統·以後의 軍事力 建設에 對備하기 위해서 統·以後의 한국의 國防部門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國防態勢 및 軍事戰略과 이를 具現하기 위한 軍事力 所要에 대해서 따로 區分해서 論議하기로 하겠다.

우선 한국의 軍事戰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未來 한국의 軍事戰略의 부분에서 있어서는 많은 論爭과 主張들이 많지만 이러한 논쟁들이 실질적으로 現實에 適用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現存의 威脅에 너무나 偏重된 軍事戰略만을 固守하려는 性向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사실상 未來에 대한 軍事戰略을 ‘地域 및 世界平和에 寄與한다’는 정도의 언급으로만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戰時作戰統制權의 喪失에 의한 制限要素에 起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의 戰略的인 關心의 缺如에서 招來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地域 및 世界的인 概念에 걸 맞는 戰略의 構築이 시급하다.

韓國의 戰略 目標은 戰略의 概念에서 韓·美 聯合戰力을 基盤으로 國家의 軍事 및 非軍事 力量을 統合 運營하여 북한의 挑發意志를 사전에 粉碎한다는 부분에서 自主的인 면이 많이 缺如된다. 그러나 이것은 작금의 국제정치 및 군사적인 현실로서는 既定事實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추가하여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 군사전략의 개념에는 情報優位の 達成, 戰力 運用의 極大化, 民防衛·動員戰力の 統合運用, 그리고 對 周邊國 軍事協力體制 強化 등의 具現方案들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있다

그 외에도 현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변화와는 별개의 것일 수 있는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戰力の 按配를 하여야 한다. 체제의 붕괴 위협에 몰린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局地挑發을 일으키거나, 북한내 流血事態나 大量 脫北者의 發生, 大量 殺傷武器에 대한 統制力 喪失 또는 無政府 狀態의 混亂 造成을 對備하여서 連의 準備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對北 抑制의 次元에서 平時에 追求하는 戰略이다. 현재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優越한 體制를 갖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북한과 전쟁을 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武力統·보다는 平和的인 統·이나 그에 준한 平和를 追求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평화적인 의도들이 묵살되고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는 상황에 대비한 戰時

軍事戰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不可避한 것이다.

이러한 戰爭에 對備한 戰時 軍事戰略은 이미 한국의 주요 일간지 및 미국의 News Weekly지 등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韓美聯合司의 戰爭計劃에서 잘 나타나 있다. 作計 5027에 명시되어있듯이 最短時間 內에 北漢地域을 席捲하여 國上統 · 基盤을 造成하는 것에 戰略의 目標을 둔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敵의 攻擊을 阻止하여 初期에 攻勢移轉을 함으로써, 戰場을 敵地로 擴大하여 首都圈의 安全을 保障하고 敵의 戰略重心을 癱瘓시켜 初期에 戰爭을 終結, 自主的 統 · 與件을 確保하는 概念을 갖고 戰略을 追求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國家의 總力戰이란 개념 하에, 軸의 戰略的인 縱深防禦, 敵 重心의 初期 無力化, 國際的인 支持 獲得, 그리고 한국의 單獨 作戰能力의 培養으로 實現이 可能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主 勢力이 韓國임에도 불구하고 戰略的인 判斷의 自由가 缺如된 韓國의 軍事戰略으로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것은 美國이 日本에게 新 安保 共同宣言에서 相互間的 牽制 效果를 얻는 것처럼, 美國도 韓國 그리고 周邊國에 對한 牽制를 위해서 駐韓 美軍의 存在가 必要한 것이다.

나. 韓國의 未來 軍事戰略概念과 구현방책

國防目標의 達成을 위해 우리는 가장 合理的이며 效率的인 軍事戰略의 確立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軍事力의 構築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韓國은 여태까지 너무 北 쪽만을 쳐다보면서 西쪽에서 도움을 올 것을 기다리

고만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過去의 軍事政策은 우리의 政治 · 軍事的인 側面에서 考慮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選擇할 수 있었던 最善의 政策이었고 戰略이었을 것이라는 事實도 또한 否定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經濟能力과 國家開發 政策을 考慮해 볼 境遇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國力은 過去와는 判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未來의 戰爭樣相과 國際 政治的인 環境, 그리고 우리의 統 · 韓國을 勘案한 가운데에서 未來의 國防政策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여태껏 北韓威脅 對備爲主의 軍事戰略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우리의 國家利益確保에 對한 未來의 不確實性 威脅에 對處하기 위한 軍事戰略의 樹立이 實하게 要求되고 있으며, 이러한 戰略의 구현을 위한 軍事力의 具備가 必要하다.

이러한 觀點에 立脚하여 國防部 및 合參에서도 現在까지 많은 努力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軍事力 建設政策이란 軍事戰略과 一致하는 合目的性이 維持되는 가운데에서 企劃되고 計劃되어야 하며, 또한 適時性이라는 要素를 勘案한다면 軍事力의 建設은 長期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必要時에 適期에 具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經濟能力이 充分히 考慮된 가운데에서 總體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優先 韓國의 未來 安保狀況은 不確實하며 이로 인해서 韓國의 國家利益과 物理的 生存을 保存하는데는 不安要因들이 상존한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安保의 危險要因을 解消하고 우리의 國防政策 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軍事戰略은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對備한 戰略中心에서 未來의 不特定 威脅對備 中心

으로 轉換시켜야 한다는 事實이다. 이는 軍事戰略을 구현하기 위한 軍事力 建設政策을 위해서는 절실히 要求되는 事案이다. 왜냐하면 軍事力 建設의 lead-time을 勘案할 경우 現在의 軍事力 建設方向은 未來 韓半島의 安保狀況을 考慮한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推進科程에서도 未來의 戰爭樣相에 대한 考慮가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未來의 戰爭樣相은 과거의 戰爭樣相과는 次元을 달리하는 概念으로 軍事力이 設計되어야 한다. 즉 戰場의 디지털개념화와 電子情報戰의 概念에 對備한 方向으로 軍事力の 建設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軍事力建設이란 엄청난 國防財源을 要求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國家의 經濟能力에 걸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軍事戰略의 選擇과도 깊이 連繫되어져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의 적인 北韓의 軍事的 威脅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北韓의 威脅에 對備한 軍事戰略 역시 매우 必要的 事案이다. 따라서 北韓의 威脅도 동시에 考慮하여야 한다. 이러한 狀況 하 에서는 특히 軍事力 建設部門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저자의 의견으로는 軍事戰略의 選擇에 있어서 二重戰略을 擇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對 北韓威脅에 대한 戰略과 未來 戰場環境과 統一韓國의 軍事戰略을 區分하여 設定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韓國의 軍事力 建設方向을 設定하고 이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未來의 威脅에 對備하는 軍事戰略을 設定하여 이에 따라서 軍事力을 建設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對 北韓威脅 對備 軍事戰略에 立脚한 軍事力の 建設은 未來의 戰場環境에는

진부한 軍事力을 具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國防財源의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未來의 威脅對備 軍事戰略을 設定하여 이에 따른 軍事力 建設方向이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推進方向은 다분히 現在의 주한 미군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現在 당면하고있는 北韓의 軍事的 威脅을 抑制시키면서 韓國의 未來 獨自의 전략구현을 위한 軍事力 建設에 國防財源을 集中的으로 投資함으로써 國家 資源을 效率的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美軍의 韓國駐屯은 一定期間동안 必要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는 생략하겠다.

韓國의 未來 軍事戰略概念의 發展에 重要 考慮要素로는 장차 地域安保 秩序와 同盟關係의 發展, 韓國을 비롯한 周邊國家들의 國力과 軍事 潛在力과 未來의 紛爭要因에 따른 韓國이 直面할 軍事的 威脅形態 등이다.

이러한 考慮要素들을 勘案한 韓國의 未來 軍事戰略은 國益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積極的 防衛戰略概念으로 첫째, 韓國의 領土와 利害領域에 대한 軍事挑發의 事前 豫防 및 抑制, 둘째, 紛爭勃發 時敵의 挑發을 最大限 國境線 밖에서 最短期間에 擊退, 셋째, 領土內 進入時 國家總力戰 遂行, 넷째, 生存을 위한 海上交通路의 確保에 目標를 두어야 할 것이다.¹²⁾

첫 번째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平時 軍事外交의 強化로 威脅要因의 緩和를 꾀하고, 韓·美同盟의 效率的인 活用을 통한 抑制를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豫想 敵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信賴

性 있는 戰力이 具備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攻勢의 防衛와 柔軟 防衛戰略의 同時 追求이다. 攻勢의 防衛는 領土權 밖을 主戰場化 하여 國力의 犧牲을 最小化하고 柔軟 防衛는 戰爭의 豫防을 위해 最大限 努力과 同時에 紛爭勃發 時 局地戰으로 制限하여 韓國에 유리한 戰場環境을 造成 하고 國益을 保護하는 概念이다. 制限된 空間에서 最 尖端戰力에 의한 戰爭遂行概念으로 國力이 相對 的으로 작은 韓國에게 유리한 戰爭遂行概念이 될 수 있다. 만약 全面戰으로 擴大 될 경우에는 總力戰形態의 拒否防衛와 同盟國들과의 聯合防衛戰略으로 敵을 擊退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生命線인 海上交通路의 確保는 未來 韓國의 軍事能力을 考慮하여 友邦國들과의 協力을 통한 保護對策을 講究하여야 하겠다.

紛爭을 豫防하고 抑制하기 위해서는 敵의 軍事挑發 徵候를 면밀히 감시하여 사전에 警報하고 軍事力의 顯示와 施威를 效果의으로 逆營하여야 한다. 韓國은 軍事挑發이 發生할 경우 未來戰의 遂行概念에 의해 敵을 擊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戰爭遂行으로 戰場을 可視化하기 위해서 各種 軍事體系를 統合하여 情報中心의 作戰이 遂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심마비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敵의 戰爭本部 등 戰略, 戰術, 作戰의 中心을 探知하고 識別하여 攻撃함으로써 敵의 戰爭意志를 屈伏시키기 위한 가장 效果의인 方法이다. 또한 우세한 敵의 脆弱點을 最大限 活用하는 非對稱戰을 遂行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拒否의 防衛를 遂行하기 위한 國家 總力戰形態의 長期戰은 弱小國들이 採擇하는 主要形態로서 大量破壞武器, 미사일 및 사이버무기 등이 主要手段으로

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IV. 軍事戰略과 軍事力 建設의 優先 順位

1. 軍事戰略과 軍事力 建設의 連繫性

여기서 우리는 現存 그리고 未來 威脅의 連繫性을 發見하는 것이 重要한 核心이 된다. 現在와 未來를 別개의 것으로 판단하여 그것에 대한 豫測이나 準備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未來에 대한 戰略的인 判斷이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軍事力을 政治의 또 다른 道具로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道具가 現在에는 必要하지만 未來에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非效率性이 發生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次元에서 現在의 戰略과 未來의 戰略은 連繫性이 있어서 持續的으로 변화하면서도 未來에 適川이 가능한 戰略을 所要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戰略을 決定하는 것은 現在 및 未來의 威脅을 모두 包含하여서 考慮한 다음에 가장 適切한 戰略을 精해야 한다. 이것은 威脅이란 原因과 戰略이라는 結果의 因果關係에 의한 連繫性과, 現在와 未來의 威脅에 대한 總括的인 戰略이라는 時間的인 連繫性을 同時에 滿足시키는 戰略을 決定하는 것이 보다 效率的이라는 것이다.

〈표-2〉 전략의 연계성 선택 영역

세계	7구역	8구역	9구역
주변지역	4구역	5구역	6구역
한반도	1구역	2구역	3구역
	과거	현재	미래

現在 韓國의 戰略的인 發展을 본다면 1과 2구역의 戰略을 주로 設定하여서 自主國防을 達成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은 時間的으로 過去와 現在를 指向하고 그리고 韓半島에 局限하는 政策 및 戰略을 指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時代에 뒤떨어진 國家로 轉落하는 結果와 同一한 것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에 韓國의 軍事戰略은 4와 5구역을 包含하는 戰略을 追求하기 위해 많은 努力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단 自體的인 安保戰略의 達成을 前提로 하여 1과 2구역의 戰略을 達成하고 그 領域을 擴大한 것으로 解釋이 可能하다.

결국 國家의 能力이 伸張되면서 그 戰略의 領域도 擴大되는 것으로 解釋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의 伸張은 現在에 급급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現在를 支配하는 勢力이라도 未來를 準備하지 않는다면 그 霸權은 언젠가는 挑戰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軍事戰略 및 軍事力 建設 政策을 樹立할 경우에는 제2, 3, 5, 6구역을 指向하는 方向으로 推進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 根據하여 본고에서도 軍事戰略과 軍事力 建設의 方向을 設定할 것이다.

2. 軍事力 建設所要의 優先 順位

위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戰略的인 考慮가 適用이 된다면 이것은 軍事力 建設에도 過去에 바탕을 둔 未來를 準備하는 次元에서의 軍事力 建設 政策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次元에서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韓國은 未來에 대한 部分의 考慮와 軍事戰略과의 一致性이 결여된 상태에서 軍事力 建設을 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變化된 國際環境에 適應할 수 있는 戰略을 바탕으로 그에 適合한 軍事力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軍事力의 建設을 위해서 優先的으로 必要한 것은 戰略이겠지만, 다음으로 必要한 것은 그 戰略에 바탕을 둔 優先 順位の 設定이다.

韓國의 경우 量的인 水準은 어느 정도 達成이 된 상태이다. 심지어 이제는 軍 減縮에 대한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고, 將來에는 兵力과 部隊는 漸進的으로 減縮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韓國軍은 軍事力 建設을 첫째로 量的인 增大를 追求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質的인 水準의 向上을 도모하면서 小規模 精銳化를 해야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經濟性的 측면에서 韓國은 小規模 投資로 集中된 統合戰力 發揮의 效率性을 劃期的으로 增加시킬 수 있는 分野에 投資를 해야 한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體系의 獲得보다는 기존의 戰力體系別로 完全성과 戰鬥力 上昇效果를 補完시키는데 優先的으로 投資를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大規模의 戰力이 要求되는 分野에는 聯合戰力에 依存하여 駐韓美軍을 韓國에 두는 것이 經濟的으로 韓國에 利益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未來戰力을 위한 漸進的인 轉換이다. 이것은 現在의 戰鬥力을 最大化 및 現代化하는데 重點을 두면서 未來 戰力에 대한 所要와 並行하여 發展할 수 있는 部分이 있으면 그것에 더 높은 優先 順位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예를 들어 衛星監視體系 같은 새로운 體系의 獲得에 있어서 眞正 필요한가의 판단이 서면 그 獲得에 대한 果敢한 投資가 必要함을 意味한다. 이러한 初期 投資의 重要性은 時間이 지날수록 그 波及效果가 커지게 된다.

軍事 戰略的인 觀點에서 볼 때 一般的으로 軍事 力을 體系別로 區分하면 情報體系, 戰場管理體系, 防護體系, 打擊體系, 機動體系 그리고 支援體系 등 여섯 가지 체계로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때로는 다른 觀點에서 根據해서 다르게 주장 할 수 있겠지만, 武器들의 戰爭遂行 技能體系들을 人別하여 6 가지 정도로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體系들에 대한 優先 順位를 選定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戰略的인 考慮를 거쳐서 判斷하여보면 韓國의 戰略環境에 맞는 優先 順位를 選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 分類된 6가지 體系는 사실상 戰鬪力 發揮에 必須的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武器體系들의 均衡的인 發展이 推進되어야만 戰略具現을 위한 戰鬪力 發揮이 極大化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武器體系들의 現代化 및 建設에는 일시에 많은 財源이 所要되기 때문에 短時日에 確保하기란 現實的으로는 거의 不可能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武器體系간에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동안 不均衡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서열이 정해져서 특정한 武器體系 부문에 보다 많은 努力을 기울이는 戰略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武器體系의 建設과 韓國의 戰略과 連結해서 考慮해 보면 現存 威脅과 未來 威脅에 대한 韓國의 戰略이 抑制와 短期決戰을 기하는 現存 戰略에는 數的인 優位를 達成하는 것이 보다 重要했었다는 사실과, 未來의 不特定 威脅에 대해서는 情報能力과 情密打擊能力이 더욱 더 切實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優先 順位를 결정할 때 考慮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3> 무기체계별 우선 순위의 변화추세

체계별 구분	현재 (수적 수준)	미래 (질적 수준)
정보 체계	5	1
전장관리체계	6	2
방호 체계	3	3
타격 체계	1	4
기동 체계	2	5
지원 체계	4	6

과거 韓國의 軍事力建設 政策의 경우, <표-3>과 같은 優先 順位の 變化가 數的으로 劣勢인 韓國의 戰力이 戰略的인 價値를 일차적으로 發揮하기 위해서는 數的인 對等함이 達成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순한 戰力의 增強에만 努力이 集中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集中을 이제는 北韓뿐만 아니라 不特定한 威脅에 대한 對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多目的 그리고 多技能의 軍을 育成하기 위한 質的인 向上을 도모하기 위해서 未來의 軍事力建設은 <표-3>에서와 같은 優先 順位の 變化를 가져왔다.

우선적으로 戰略的인 考察로 現存 威脅에 대한 考慮에서 볼 때 防護, 打擊 및 機動體系의 重要性이 대두되어서 초창기에는 軍事力建設이 이러한 體系들을 數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努力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數的인 水準이 達成되면서 情報體系, 戰場管理體系 그리고 支援體系의 重要性이 증대되었다. 특히 情報體系의 경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未來 戰爭의 中心을 情報戰에 두고 情報優位를 바탕으로 한 作戰概念을 구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未來의 不特定한 威脅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長距離 戰場監視와 情密打擊能力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이것은 情報力과 情密打擊力이 不確實한 未來의 敵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有用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이전에는 단순한 數的인 比較優位를 達成하려는 노력에서 이제는 質的인 水準을 더 達成하여 먼저 보고 먼저 打擊 하는 能力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未來에 대한 戰力追求가 現存의 威脅에 대한 對應能力을 犧牲하면서 추구된다면, 이것은 現實的인 矛盾에 직면하게 된다. 어떠한 조직도 現在에 生存하지 못하고서 未來에 存在할 수 없기 때문에 戰爭도 現在의 戰爭을 勝利한 이후에 未來의 戰爭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現存의 威脅에 대한 效果的인 對應方法을 提供하면서도 未來의 威脅에 對應 할 수 있는 能力을 同時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戰略的 重要性의 측면에서 情報體系의 重要性이 부각되는 것에 대하여 반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이 걸프전에서 수행하였던 情密打擊能力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體系와 情密打擊能力이 다른 戰場管理, 防護, 機動 그리고 支援體系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體系들간의 有機的인 相互發展을 통해서 진정한 統合的인 戰鬥力이 發揮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韓國의 軍事力建設 方向

1. 韓國의 軍事力建設과 國防政策의 變遷

韓國의 國防政策은 建國 以後 戰爭을 겪으면서 完全한 基盤이 없는 狀態에서부터 시작하여 現在의 水準에 이르렀다. 이러한 國防政策의 變遷 區分은 어디에 根據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리 區分될 수 있겠지만 國防部의 基準에 따르면 크게는 5개의 期間으로 區分이 된다. 제 1기는 建軍期(1946-1950), 제2

기는 戰爭 및 國防整備期(1950-1961), 제3기는 國防體制 定立期(1961-1971), 제4기는 自主國防 建設期(1972-1989), 제5기는 國防態勢 發展期(1990-)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이러한 變遷科程에서도 볼 수 있듯이, 韓國은 自主的인 國防力을 어느 程度 構築하는데도 상당한 期間이 걸렸다. 그리고 이러한 自主國防도 사실상 어느 程度의 不確實性을 內包하고 있다. 당면한 北韓의 威脅에 대한 戰爭 抑制力을 美國에 依存하고 있는 韓國의 이러한 自主國防에 대한 試圖들이 事實上은 제자리걸음 또는 채면치레 程度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는 境遇도 많았다. 이러한 時點에서 國防態勢를 發展시켜 不特定한 威脅에 대한 對處 能力을 向上한다는 것이 과도한 課題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未來란 항상 不確實한 것이기 때문에 軍事的인 면에서 하나의 企圖戰을 完勝할 수 있는 能力을 完備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低強度 威脅에 대한 多樣한 對處能力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必要한 時期가 되었다. 完全한 戰爭能力을 갖추는 것이 가장 理想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現實的으로 實現 不可能한 課題가 될 可能性이 크다. 現在 完璧한 能力을 保有하는 것이 未來의 戰爭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항상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國防部에서는 1994년 3월 10일 國防日標를 改訂하면서 未來 指向的인 性向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改訂된 國防日標의 내용은 '敵의 武力侵攻'을 '外部의 軍事的 威脅과 侵略'으로 地域的인 安定과 平和에 寄與한다'를 地域的인 安定과 世界平和에 寄與한다'로 變更한 것으로서 이는 지금까지

단순히 北韓의 軍事的 武力侵攻만을 國家保衛의 對象으로 尙定하여 왔으나, 現在의 安保概念이 軍事爲 主의 概念에서 政治, 經濟, 外交, 文化 等を 包含한 總體的 安保概念으로 變化됨에 따라 豫想되는 모든 形態의 威脅에 對處한다는 包括的 概念으로 安保對象의 範疇을 擴大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軍事力建設 측면에서의 肯定的인 해석과는 반대로 일부 言論에서는 北韓의 威脅을 가장 當面한 威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分析을 하는 傾向이 있었고, 이를 문제삼는 意見이 나타나서 '95년의 國防白書에서는 北韓을 主敵으로 區分하였고, 이는 다시 最近에 들어와서는 6·15宣言 以後 北韓의 持續된 항의 및 一部 國民들의 否定的인 認識의 擴散으로 이에 대한 論議가 活性化되고 있는 實情이다.¹⁵⁾

이것은 제5기의 國防體制定立이라는 目標의 設定으로 보다 未來指向的인 面으로 發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軍事力建設에 있어서 北韓의 威脅과 未來의 不特定威脅을 同時에 對備하는 政策을 추구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政策의 變化는 過去에 안고있었던 軍事對備態勢에서의 二重性으로 인한 國防財源의 浪費要因을 克復하기 위해서 北韓의 威脅과 未來 不特定威脅을 同時에 對處할 수 있는 武器體系를 中心으로 軍事力建設政策이 轉換되었다. 이런 發展의 追求는 世界的인 傾向과도 一致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國家들이 推進하는 方向이기도 하다.

2. 韓國의 軍事力 建設政策 分析

軍事力建設政策에 대한 分析은 크게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軍事的인 次元으로서 軍事戰略을 具現하여 國防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軍事力인데 과연 韓國의 軍事力建設政策의 方向이 이를 充足하였는가하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政策의 失行過程에서의 經濟性 및 效率性에 관련된 사안이다.

첫 번째 사안은 韓國의 國防政策目標과 軍事戰略 그리고 軍事能力的 關係의 適合性을 分析해야 한다. 韓國의 國防政策目標은 "外部의 軍事的 威脅과 侵略으로부터 國家를 保衛하고, 平和統一을 뒷받침하며, 地役의 安定과 世界平和에 寄與"로 되어있다. 外部의 軍事的 威脅과 侵略으로부터 國家保衛는 北韓과 外部로부터의 國家保衛를 말하며, 平和統一의 뒷받침은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와 軍事的 緊張緩和, 安定과 平和定着을 통한 平和統一에 寄與, 地役의 安定과 世界平和에의 寄與는 軍事的 隣接國家들과 友好協力關係增進을 통한 地役의 安定과 平和에 寄與와 유엔을 중심으로 世界平和維持努力에 積極的인 參與를 말한다.¹⁶⁾

이러한 國防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軍事戰略은 軍事力建設과 連繫해서 볼 때 1990년 이전까지는 北韓의 軍事威脅對備에 중점을 두어, 平時 戰爭抑制와 戰時 短期決戰을 기조로 하여 모든 것을 窮極的으로 自主的 防衛態勢로서 維持한다는 概念 하에서 추구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中盤期에 들어와서는 21세기 未來戰場環境에 부응하고 北韓의 軍事的 威脅과 동시에 外部의 潛在的 威脅에도 對備하는 概念으로 發展하였다. 이러한 發展은 그 동안 꾸준히 持續되어온 軍事力建設政策의 結果로 北韓의 軍事的 威脅對應 戰力이 1차적으로 達成되었고 不足한 部門은 未來의 潛在的 威脅과 戰場環境에 부응하는 尖端軍事力的 確保를 目標로 하여 軍事力建設을 推進함으로써 克復한다는 概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政策推進結果 韓國의 軍事力은 北韓에 비해서 相對적으로 現代化되었고 나아가서 戰鬪力이 向上되어 최근 연평해전에서 경험했듯이 北韓의 軍事的 挑發을 混出할 수 있게 되었다.

3. 韓國의 軍事力建設 方向

現在 韓國軍은 國防政策의 遂行에 있어서 두 가지의 構造的인 隘路點을 안고있다. 첫째는 戰力構造的인 애로점이다. 현재 韓國軍은 兵力中心의 軍 構造임에는 틀림없다. 이는 戰力의 配備面에서 그러하다. 즉 北韓과 대치하고 있는 前方地域에 兵力 및 部隊를 集中配置하고 있으며 部隊構造面에 있어서도 現代의인 武器體系의 배치에 따른 革新的인 基本構造 애로의 轉換이 없는 가운데 40여년동안 戰力構造的인 軍 構造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在來式 武器體系를 보유하고 있는 兵力의 集約度가 높은 北韓軍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戰力構造的인 必要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統 · 後에 예상되는 周邊의 威脅과 戰場環境 등을 고려해 볼 때 戰力構造的인 現代化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尖端武器體系가 中心이 되어 戰力構造的인 技術集約形의 軍 構造로의 轉換이 이루어져야 한다. 戰力構造的인 轉換을 위한 선행요구기간(lead time)을 고려해 볼 때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戰力構造的인 轉換作業이 政策化되어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¹⁷⁾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戰力構造的인 轉換이 늦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適定水準 이하의 國防豫算이다. 즉 兵力重心의 戰力構造的인 經營이 技術集約形 戰力構造的인 經營보다 經濟적으로 費用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이는 主要 先進國들과 韓國의 경우를 보유하고 있는 兵力水準과 國防豫算을

비교 해보면 分明해진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현재의 韓國의 戰力構造的인 經營面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조이나 이는 中 · 長期的으로 볼 때 人力經營費의 增加로 인하여 國防費 中 人力 및 部隊經營 維持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서 軍事力建設 投資費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效率的인 國防費의 構造的인 實現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現 韓國軍의 戰力構造的인 國防費의 여건상 將次 統 · 韓國의 國防環境에 적응할 수 있는 國防能力을 갖추는데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軍事力建設의 政策方向의 基本 前提條件으로 兵力集約形의 戰力構造的인 技術集約形의 戰力構造的인 轉換이 必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統 · 後에 당면하게 될 周邊의 國防環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最尖端 武器體系로 裝備한 막강한 周邊國들의 틈바구니에서 自主的이고 積極的인 國家의 利益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必修 不可缺한 사안이다. 또한 이러한 戰力構造的인 轉換을 위해서는 國防費의 配分構造的인 實質的인 軍事力建設이 이루어질 수 있는 構造的인 轉換되어야 한다. 즉 國防費의 配分構造的인 面에서 軍事力建設部門의 投資費가 國防費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3분의 1을 상회하는 선에서 持續적으로 維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國防費의 配分構造的인 面이 매년 持續적으로 實質的인 軍事力建設이 이루어질 수 있는 效率的인 構造的인 것이다.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國防費의 配分構造的인

을 살펴볼 때 3분의 1 이상을 軍事力建設에 集中 投資함으로써 그들이 目標로 하고 있는 軍事能力을 確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¹⁹⁾

이러한 前提下에서 韓國의 軍事力建設政策의 基本目標은 自主的으로 國家를 方位할 수 있는 能力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미래 韓半島 周邊狀況을 고려해 볼 때 地域國家들간의 國家利益들의 相衡要因이 常存 하게 되고 統 一後의 駐韓美軍의 役割變化和 韓美安保協力 體制의 變化로 인해서 韓國의 國家利益 確保時 미국의 역할은 制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의 國家防禦와 利益의 確保를 위해서는 우리의 自主的인 方位力量에 依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軍 構造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基本發展概念을 未來戰爭遂行에 適合한 軍 構造로의 轉換에 두어야 하겠다. 尖端化된 武器體系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現代의인 軍 組織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國防組織과 人力의 規模를 縮小시켜서 指揮統制線을 短縮시키고 簡素化시켜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國防運營의 合理性과 效率性이 保障될 수 있는 組織體系가 필요하다. 즉 迅速한 意思決定이 이루어질 수 있는 組織體系로의 發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 각 軍 本부가 수행하고 있는 軍政에 관련된 技能을 國防部로 統合시키고 國防部는 類似技能을 統合시켜서 國防政策의 樹立 등 政策關聯 核心技能을 強化시키고, 合參은 合同軍事敎理 및 自主戰役計劃을 樹立할 수 있는 組織과 技能을 強化시키고, 각 軍 本부는 類似技能 機關과 敎育機關을 統合시켜서 명실상부한 野戰軍 司令部로서 作戰中心의 組織 및 技能體系가 이루어질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尖端 技術 軍 建設을 위한 政策의 方向이다. 우선 未來에 갖추어야 할 自主的 國家方位力量을 위한 基盤戰力의 基礎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으로서, 現在 保有하고 있는 軍事能力의 戰鬪力發揮를 極大化시키기 위한 戰鬪準備態勢를 갖추는데 최우선을 두는 개념의 戰力補強에 주력하면서 이와 동시에 核心戰力 중 北韓 威脅을 대비하는 데에도 필요한 전력은 統 一以前까지 國家의 可用財源 範圍 내에서 戰力化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對處하는데 必須戰力이지만 國防財源의 效率的인 사용을 위해서 駐韓美軍이 保有하고 있는 代替戰力を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政策方向 下에 具體的으로 確保되어야 할 武器體系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周邊地域의 戰略情報能力和 統合指揮戰力 면에서는 廣域化되고 分散된 地域에서 地·海·空의 立體戰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戰鬪部隊는 물론 戰鬪支援部隊까지도 상호간의 자유로운 情報交流가 요구되며, 獨自的으로 各種 情報를 蒐集하고 處理하여 管理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任務 및 各種技能을 圓滑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早期警報裝備 및 戰場을 監視할 수 있는 裝備와 空中 映像과 信號情報를 蒐集할 수 있는 戰鬪機가 필요하며, 전투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의 自動化가 이루어져서 작전의 指揮力이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電子戰 狀況下에서 作戰部隊의 指揮와 通信이 圓滑하게 保障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 戰略的인 打擊 및 立體的 高速機動戰力의 擴充部門이다. 現代戰의 樣相이 枝葉的인 作戰

및 戰術的인 次元의 作戰보다는 戰略的인 目標을 打擊하는 對應方法을 重要시하기 때문에 短期間 내에 作戰을 끝낼 수 있는 速戰速決의 能力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長距離 미사일 등 적 후방에 위치한 표적을 戰略的으로 打擊할 수 있는 戰力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打擊과 機動能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支援戰力の 確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國家經濟的인 면에서 海上交通路가 필히 確保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未來 戰略環境變化에 부응할 수 있는 海洋統制能力을 補完하고 地域海域의 哨戒能力과 早期警報能力 및 海上戰鬪支援能力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海上監視 및 交通路의 보호를 위한 海上作戰能力의 擴充 및 水上, 水中, 空中에서의 立體 海上戰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上陸戰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이 具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通信 및 誘導武器體系의 補強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制空權을 早期에 掌握하기 위해서는 長距離 空中作戰을 수행할 수 있는 航空作戰能力과 選別的으로 鷹懲報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主要 核心目標을 隱密하게 浸透할 수 있는 夜間 低高度 浸透裝備와 情密爆撃을 할 수 있는 裝備를 보강하여 打擊能力을 강화하고 空中給油機의 확보로 空中作戰의 領域을 擴大하여 對 周邊國을 空中監視하고 戰爭勃發시 空中戰에서의 優勢를 確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최소한의 戰爭遂行期間을 保障하고 야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戰鬪의 效率性을 保障할 수 있는 戰爭持續能力과 生存性의 向上을 시켜야 하

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戰術 및 作戰基地의 增設 및 補完과 編制裝備 및 彈藥의 補充 및 化生放戰에 대비한 防護能力의 擴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自主的인 防産體制의 構築으로서 尖端 軍事技術을 國産化하여 核心武器體系의 開發뿐만 아니라 이러한 技術들이 民間産業分野의 波及效果를 增大시켜서 國家 科學技術의 發展과 經濟發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즉 韓國軍의 獨白的인 武器體系의 開發領域을 擴大하여 周邊國의 潛在威脅에 대비하기 위해 核心的인 武器體系는 獨白的으로 確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⁰⁾

일곱 번째로 動員戰力에 대한 現在의 認識을 正반대로 轉換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는 動員戰力은 常備戰力の 補充戰力概念으로 認識을 하고 있다.²¹⁾ 그러나 北韓의 威脅이 減少되고, 國防財源確保의 制限과 國家資源의 經濟的 運營, 특히 統一以後의 戰力運營 面을 고려해 본다면 動員戰力을 基盤戰力으로 認識하는 大轉換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認識의 轉換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動員戰力の 戰鬪力이 極大化되어 卽應性和 生存性이 常備戰力水準으로 向上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차 南·北韓間의 軍備統制協商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戰爭遂行을 위한 所要戰力面에서 動員戰力の 戰鬪力이 極大化되면 될수록 常備戰力の 所要가 감소하게 되어 平時 國家資源의 經濟的 運營과 節約된 國防財源을 武器體系 등 軍事力建設에 轉換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軍事力建設에 있어서 動員戰力の 戰鬪力極大化도 中心事業部門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動員體制와 教育/訓練體制의 整備 및 情報化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日標軍事力を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防財源所要를 國家經濟能力 및 財政運營政策과 連繫해서 어떻게 安定的으로 確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優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이 現在 國防部에서 企劃 및 計劃하고 있는 軍事力の 所要는 統·後까지를 考慮한 所要로서 이는 統·以前까지 반드시 確保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財源所要의 規模는 이미 앞부분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企體的으로 약492.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군사력건설에 약 160.1조원, 운영유지 부문에 약332.5조원).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財源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現在 政府에서 國防部門에 割當하고 있는 財政政策의 方向을 修正하여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즉 向後 韓國經濟의 展望에 비추어 볼 때 기간 내 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평균 GDP의 4.5%를 國防部門에 投與한다면, 2015년경에 日標 軍事力이 確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90년대 정부에서 國防部門에 割當했던 수준(년 평균 GDP의 약3.2%)이 維持된다면 日標 軍事力수준은 2025년경에나 確保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統·이 이루어지는 경우 統·費用(평화공존기 통일준비 비용포함) 및 統·후 北韓地域의 經濟開發 등을 고려해볼 때 國防部門의 投資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統·韓國이 絶對的으로 갖추어야될 日標 軍事力이라면 가급적이면 統·以前에 좀더 많은 軍事力の 確保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軍事力建設의 先行要求期間(lead time : 15-20년)과 國家資源의 효율성제고를 고려해야되기 때문이다. 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武器單價上昇, 人件費上昇 등으로 현재의 low-cost는 통일후의

high-cost를 의미하기 때문에 財源의 所要는 엄청난 규모로 增加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和解協力 및 平和共存期에 到達하였다손 하더라도 現在의 軍事力建設速度 및 規模는 日標軍事力이 確保될 때까지 持續되어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國家經濟여건이 좋을 때는 國防財源을 더 많이 確保하여 速度와 規模를 높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統·이 어느 時點에서 達成되느냐와 統·前까지 國防費의 規模가 어느 水準에서 決定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留意하여 政府에서는 國防豫算을 策定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國家經濟能力과 軍事力建設과의 關係는 國防企劃管理體系上 軍事戰略의 選擇 時 國家經濟能力이 制限要素(constraint)로서의 役割에서 起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軍事戰略의 日標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軍事力이라는 手段이 必須의인데 이러한 軍事力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經濟能力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提示되고있는 能力에 基礎한 軍事力建設이란 軍事戰略의 選擇科程에서 하나의 基準要素로서 作用하는 것이지 이미 選擇된 軍事戰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中·長期 軍事力の 建設에 必要한 國防財源의 所要가 國家經濟能力에 制約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韓國의 軍事力 建設政策은 일면에 있어서는 過去의 戰略에 얽매어서 推進 되었기 때문에 現在의 戰力具備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戰略的인 識見을 보다 柔軟하고 未來指向的인 戰略으로 變化시켜서, 진정으로 韓國의 安

保狀況과 地域 및 世界的인 정세에 맞는 戰略으로 擴大시켜야 한다. 이러한 戰略的인 思考의 擴大는 결국 그것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의 軍事的인 측면에 대한 建設計劃의 變化를 가져올 것이다.

軍事力建設 政策의 基本 前提條件으로 兵力集約形의 戰力構造에서 技術集約形의 戰力構造로의 轉換이 必須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國防費의 配分構造面에서 軍事力建設部門의 投資費가 國防費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적어도 3분의 1을 上廻하는 線에서 持續的으로 維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韓國의 軍事力建設政策의 基本目標은 自主的으로 國家를 防衛할 수 있는 能力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軍 構造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基本發展概念을 未來戰爭遂行에 適한 軍 構造로의 轉換에 두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國防運營의 合理性과 效率性이 保障될 수 있는 組織體系가 필요하다. 즉 迅速한 意思決定이 이루어질 수 있는 組織體系로의 發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 각 軍 本부가 수행하고 있는 軍政에 관련된 技能을 國防部로 統合시키고 國防部는 類似技能을 統폐합시켜서 國防政策의 樹立 등 政策關聯 核心技能을 強化시키고, 合參은 合同軍事敎理 및 自主戰役計劃을 樹立할 수 있는 組織과 技能을 強化시키며, 각 軍 本부는 類似技能 機關과 敎育機關을 統폐합시켜서 명실상부한 野戰軍 司令部로서 作戰中心의 組織 및 技能體系가 이루어질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尖端 技術 軍 建設을 위한 政策의 方向이다. 우선 未來에 갖추어야 할 自主的 國家防衛力 量을 위한 基盤戰力의 基礎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으로서, 現在 保有하고 있는 軍事能力의 戰鬪力發揮를 極大化시키기 위한 戰鬪準備態勢를 갖추는데 최우선을 두는 개념의 戰力補強에 주력하면서 이와 동시에 核心戰力 중 北韓 威脅을 대비하는 데에도 필요한 전력은 統 · 以前까지 國家의 可用財源 範圍 내에서 戰力化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北韓의 軍事的 威脅에 對處하는데 必修戰力이지만 國防財源의 效率的인 사용을 위해서 駐韓美軍이 保有하고 있는 代替戰力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있는 軍事力 建設의 方向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軍事力의 區分과 重點推進을 위한 優先 順位를 明確하게 設定하여 期間 內에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그 努力의 方向을 設定하여 推進해야 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미 주

- 1)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국방부, 1996), p. 33 도표 1 및 국방백서, 각년도 와 국방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방비관련 홍보책자를 참조.
- 2) 대한민국 국방부, 「울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1996), p.33, 대한민국 국방부, 「문답으로 알아보는 우리의 국방비」, (서울,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1994), p.37 및 「국방백서」 각 연도 참조.
- 3) 금년들어 국방부에서는 김동신 국방장관 취임이 후 새로운 국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능력에 기초한 군사력 건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 저자의 견해가 본 연구의 독립된 장에서

- 설명되고 있다.
- 4)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주요 언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지난 8월15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평양 범 민족 통일경축행사에서 일부 급진세력들의 주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 외에도 각종 안보관련 국민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의 대 남한 침략의지 및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세대학교,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2001년 8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의뢰 연구보고서 참조.
 - 5)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국방기본정책서”(99-15)에서 개념이 도입이 되었으며, 이를 21세기 국방대비태세에서 정책화하였다.
 - 6)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한국의 국방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겠다. Pil-jung Lee, 「Budgeting For Defence: A Model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Experience」, 1990, Ph.D. Thesis, pp. 191-203, 윤석완, 이필중, 「21세기 한국의 적정 국방비」, 200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pp. 50-65.
 - 7) 이러한 연구들로서는 강성진(1992), 김덕영(1992), 이철희(1994), 안영락(1995), 조동호(1997) 등이 있다.
 - 8) 이러한 논리체계로 접근하여 국방비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로서는, 현인택(1991, 1992), 강명길(1994), 김수영(1994)등이 있다. 김수영, “국방비 책정과 운영과제,” 국방논집 제25호, 1994, pp.3-36. 국방비관련 기존 연구들에 대한 논의는, 안영락, “한국의 국방비 지출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방논집 제32호, 국방연구원, 1995, pp.201-202 참조.
 - 9)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한국개발연구원, 1997) 참조.
 - 10) 한국의 경우 군사능력 및 경제능력 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11) 미래의 무기체계에 대한 단가의 예측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체계의 단가를 기초로한 군사력건설 사업의 자금소요는 전체적 규모로 볼 때 1%범위 안에서 bound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에서 추계되고 있는 수치는 국방부에서 제시한 '97-'03기간 동안의 방위력 개선사업들과 운영유지 부문의 사업들에 대한 자금소요의 추세를 근거로 하여 환산 하였다. 이견제, “한국의 안보와 적정 국방비,” 국방비 정책논집, 국방부, 1997, 참조.
 - 12)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지난 5월에 육군본부가 주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였다. 박창권, “미래전 대비 군사전략 개념 및 발전방향,” 대한민국 육군본부, 「정예 정보기술군 건설을 위한 육군의 전략적 선택(논문요약)」, pp.7-17.
 - 13) 장문석외 1, “한국 군사전략의 변천과 미래전략 선택방향:1945년 이후”, 정책연구보고서 97-7, (서울: 국방대학원, 1997), p. 2.
 - 14) 전개서, p. 41.
 - 15) 1994년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정책목표의 논의에 대하여 조선일보 및 한국일보에서 이에 대한 분석기사가 있었으며,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서 국방부에서는 1995년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구분

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2000년 6·15선언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6·15선언 이후 북한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계층에서는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다시 1994년의 국방목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 1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각 년도 참조.
- 17) 선행요구기간(lead time)은 무기체계의 경우 15-20년, 인력의 경우 20년이 소요된다.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6년, 「올곡 사업의 어제와 오늘」, 1994년, 신정현 편저, "선진국방의 비전과 과제," 1996년, 나남출판사.
- 18)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01.
- 19) 이근재, "한국 안보와 적정 국방비," 「국방비 정책논집」,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1997.
- 20) 이근재, 전제서.
- 21) 이필중, "미래한국의 군사동원체제,"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39권 제2호(국방대학원, 서울, 1996, 12, pp.145-160, 이필중, "한국의 동원자산 분석방법- 군사동원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교수논총」, 제23집, (국방대학교, 서울, 2001. 8.), pp.223-260 참조.